

불평등.양극화 해소를 위한

산별(초기업)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발표 기자회견

- 일시 :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10시
- 장소 :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(1, 2)
- 참가 : 민주노총 가맹·산하대표자

1. 취지

- 특고, 간고, 플랫폼, 5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.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서 이중 배제된 비정규, 중.소.영세, 불안정노동 증가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,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.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.
- 현행 노조법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급 단위 교섭구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, △교섭단위를 기업별 구조로 제한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△협소한 사용자단체 범위 △일반화된 초기업(산업.업종)단위 노동조합 현황에 조응하지 못한 단체교섭 구조 △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용자책임 회피 문제는 초기업(산별)교섭 등 다양한 교섭구조를 제약하고 있음.
-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주 구조원인을 노동조합과 기업 내부격차에 돌리고, 부분 근로자대표제도를 추진하는 등 노사관계 분절.파편화를 추진하고 있음. 정부 노사관계 정책은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넓은 나라일수록 노동 불평등이 낮다는 실태에 역행하는 것임.
- 노사관계를 파편화하고 노동조합 역할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에 맞서, 불평등.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초기업(산별)교섭구조 활성화와 초기업(산별)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도입 등 교섭제도 전반 개혁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, 교섭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운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함.

2. 민주노총 핵심 요구와 구호

-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!
- 교섭창구단일화 폐지!
- 산별협약 효력확장!
- 공공부문 대정부교섭 법제화!
- 사용자 교섭의무 강화!

3. 기자회견 진행 순서

<기자회견 진행>

- 취지 설명 (사회 :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)
- 민주노총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운동 입장 발표 /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
- 민주노총 초기업교섭 현황 /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
- 현장발언 (각 2분 이내)

공공운수 안명자 사무처장

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

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

사무금융노조 이기철 수석부위원장

화성식품노조 신환섭 위원장

- 초기업(산별)교섭활성화 입법청원서 낭독

- 질의 응답

<끝>